

“대학 절반 이상, 회의 한번에 등록금 책정”... 공정성 도마위

등록금심의위원회 부실 논란

새해에도 경제 위기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시시비비는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아닌 ‘심’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주목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별 등록금 심의위원회 관리가 부실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연구 보고서를 공개해 이와 같은 문제를 꼬집었다.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지만 공개기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그 결과 현재 196개 대학 중 20개교는 회의록 열람이 불가능하다. 열람되는 대학도 176개 대학 중 107개교는 등록금 책정 회의를 단 1회만 진행했으며, 8개교는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처리하기도 했다.

대학가, 심의위원회 개선 요구
“인상보다 심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

대교연, 학생참여 제약 개선 등 제언
“80%가 1~2회 회의... 내실 의문”

대교연은 “80%가 넘는 대학들이 1~2회 회의만으로 등록금 심의(책정)를 종결했다는 것은 대부분 대학에서 등심위 논의가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150개 대학 중 39개교는 위원장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 법령을 위반 중이며, 43개교는 재학생만 학생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참여 제약이 존재한다. 이 중 23개교는 학생위원이 징계를 받으면 위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되는 독소 조항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

려워진다.

대교연은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과거 자료 검토 등 연속성 상에서 논의가 필요한 만큼 회의록 공시 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등심위의 공정성을 강화를 위해서라도 학생 참여 제약 규정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학과 학생들 사이 ‘등록금 인상’ 시시비비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 중 하나다. 대학들은 새해까지 15년째 동결되는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

가 꾸준하지만, 하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등록금이 14년째 동결돼 온 만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15년째 동결됐다는 입장이다. 대학가에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 수준으로 높이는 요구가 꾸준했지만 15년째 0.6% 수준에 그쳤다.

또한,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현재도 OECD 46개국 중 4위에 속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실질적으로 학생, 개인의 부담 비용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 재정 부족을 등록금으로 풀어간다면 학생들의 고충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정 전국대학생네트워크(대학생단체) 집행위원장은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등록금 인상으로 풀어가자는 것은 학생과 가정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수입을 조금 더 늘린다고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대넷은 지난 26일 등록금 캠프를 직접 주최해 학생들에게 등심위를 안내하기도 했다. 캠프에서는 대학 재정구조 및 등심위에 대한 설명부터, 대응 사례까지 다양한 내용을 논의했다.

다만 교육 당국은 고물가 등 경제 위기 상황인 만큼 등록금 인상은 신중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는 교육부가 2024년에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등록금 인상 검토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교육부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등록금 규제 개선 방향·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동행·매력 특별시로... 9개 분야 71개 사업 추진

2023 달라지는 서울생활

‘손목닥터 9988’ 지원연령 확대
‘서울둘레길 2.0’ 사업 등 추진

서울시는 올해 동행·매력 특별시를 큰 줄기로 9개 분야 총 71개 사업을 진행한다. 동행특별시에서 42건(복지 14건, 건강 5건, 교육 4건, 안전 5건, 돌봄 14건), 매력특별시 29건(경제 5건, 문화 14건, 환경 7건, 행정 3건) 등이다.

‘동행 특별시 서울’ 부문에서는 복지·건강·교육·안전·돌봄 등 5개 분야에서 42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해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우고자 노력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참여 가구 수를 2배로 확대해 추진한다.

장애인 교통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인 1명까지 무료승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늘려 올해 1월부터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는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사업도 강화해 지원 연령을 만 19~64세에서 만 19~69세로 확대했다. 서울시 체육시설



서울시청 전경

/손진영 기자 son@

과 어린이집을 연계하는 새로운 공공체육 프로그램 모델인 ‘햇돌하트서울 유아스포츠단’은 3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며, 2026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유아스포츠단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기 위해 장노년층 중심의 디지털 교육공간인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조성한다. 어르신 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쉽게 디지털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권역별로 총 6개소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는 우선 2개소를 조성한다.

서울시민의 든든한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50플러스 캠퍼스는 올해부터 만 40~64세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그간 변화된 지형 여건과 상향된 강우처리목표 등을 반영해 재해 지도를 현행화하고 개선해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할 방침이다. 재해지도 중 침수흔적도는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흔적을 조사해 표시한 지도로 지난해 호우 피해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에 열람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담, 동행서비스, 보호시설 운영까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 상담을 통한 법률·소송지원과 심리지원, 출·퇴근 시 동행서비스 지원 그리고 보호시설 연계도 제공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등 14개 돌봄 사업도 진행된다.

‘매력 특별시 서울’ 부문에서는 경제·문화·환경·행정 등 4개 분야에서 29개 사업을 시행한다. 문화 축제를 다수 진행해 시민들이 서울의 축제를 원활히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 서울둘레길2.0 등 7개 사업을 통해서 스포츠·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3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3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와 ‘정보소통광장’, 서울시 포털 ‘내 손안에 서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교육부 내일부터 1학기 학자금 대출신청 접수

금리 1.7% ... 저금리 전환대출도 실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오는 4일부터 시작한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도 4일부터 실시한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해와 같이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학부모는 기준금리(11월 기준) 3.25% 대비 1.55%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대비 3.64%p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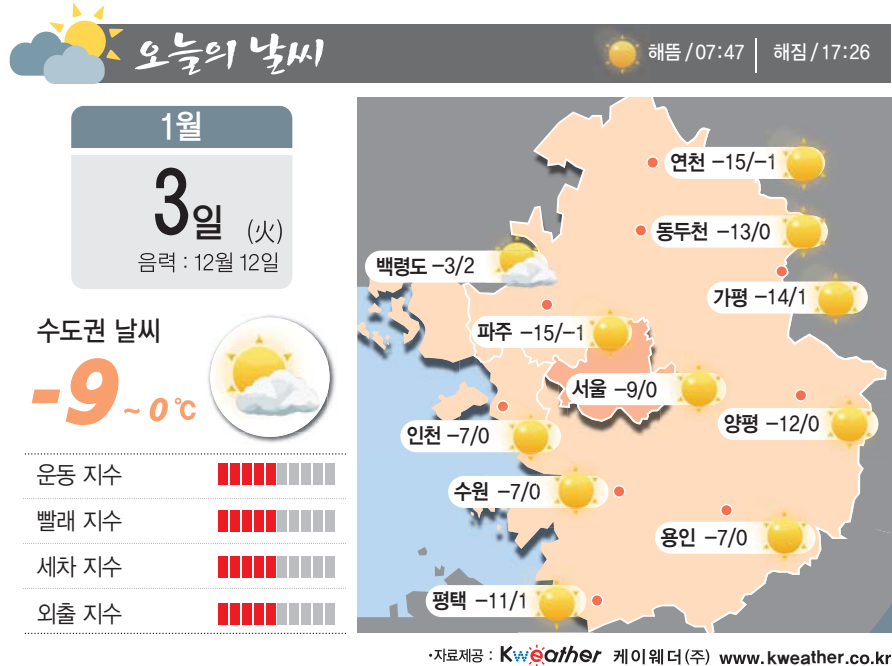
다. 기존에는 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해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개선으로 약 81만 명이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6월 2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하은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중국 코로나 환자 6억명...전국 감염률 40% 넘어”
/사진 뉴시스
▲ IMF 총재 “올해 세계 경제, 지난해보다 힘들 것”

▲ 러시아, 올해 8차례 국제 군사훈련 실시
▲ 중국군, 서해 북부·보하이서 연일 실탄훈련 실시



▲ 두바이, 주류 판매 세금 30% 폐지... “관광 활성화 목적”
/사진 뉴시스
▲ 일본중시, 오늘·내일 휴장...새해 첫 거래일 4일 사망